

2021년 11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7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11 (Vol.77)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최완영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년 11 (Vol.77)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국토부, 사업에 적합한 기준 적용 위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및 주거여건 개선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서울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개발 계획 최초 변경 고시

대전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최종 확정

강원도,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3개 권역 71개 사업 추진

10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해수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국토부, 서울시 내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시행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투입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국비 97억 원 확보

부산시, 유엔 헤비타트·오셔널스와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 체결

인천시, 22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8건에 대한 국비 확보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송도5공구 지식산업제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대형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광주시,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 12일 준공
광주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시범사업 2곳 선정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시작
경기도,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주택개조사업 665호 준공 및 집수리 등 지원
전남도, 전남도·신안군 등 자은도에 인피니또뮤지엄 건립 업무협약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8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한 설치 위해 설계 지침 최초로 마련
조달청,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비용 및 심사과정 간소화
환경부, 건설폐기물 99% 재활용위해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마련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용역 완료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1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건축정책과. 2021.11.01.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내용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 기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 -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 마련 -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존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 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국토부, 사업에 적합한 기준 적용 위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

건축정책과. 2021.11.03.



도시
정책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축법」 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정대상	-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
지정절차	-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적용예시	-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소개

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및 주거여건 개선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건축정책과. 2021.11.11.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사항]

내용	기대효과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 허용	-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	-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서울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개발 계획 최초 변경 고시

전략산업기반과. 2021.11.01.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일대의 1,922,261㎡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10.28)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G밸리의 기업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녹지를 확대하고,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내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 15% 이상 공원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하였다. G밸리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전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최종 확정

균형발전담당관. 2021.11.19.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함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0→'30년)을 반영하여, 향후 2030년까지 내륙첨단산업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아래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본 계획에는 전체 146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대전시는 지능형 로봇 기반의 정밀/ACE 공정혁신 실증지원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1조 6천억 원 (SOC 사업예산은 제외)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내륙첨단산업권 대전시 사업목록]

구분	내역사업명
핵심사업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 사업
	지능형 로봇기반의 정밀/ACE 공정혁신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연계협력사업	에너지 초광역 그린뉴딜 협력 체계 구축
	내륙첨단산업권 그린 감성 관광벨트 조성
일반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
	대전·세종 행정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및 주차장 지하화 사업
	대전철도문화유산지구 조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 해커톤 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신성배수지 내 우주천문체험관 조성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식장산 생태·문화 탐방 숲 조성사업
	국제 온천 관광 거점지구 조성

강원도,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3개 권역 71개 사업 추진

균형발전과. 2021.11.18.



국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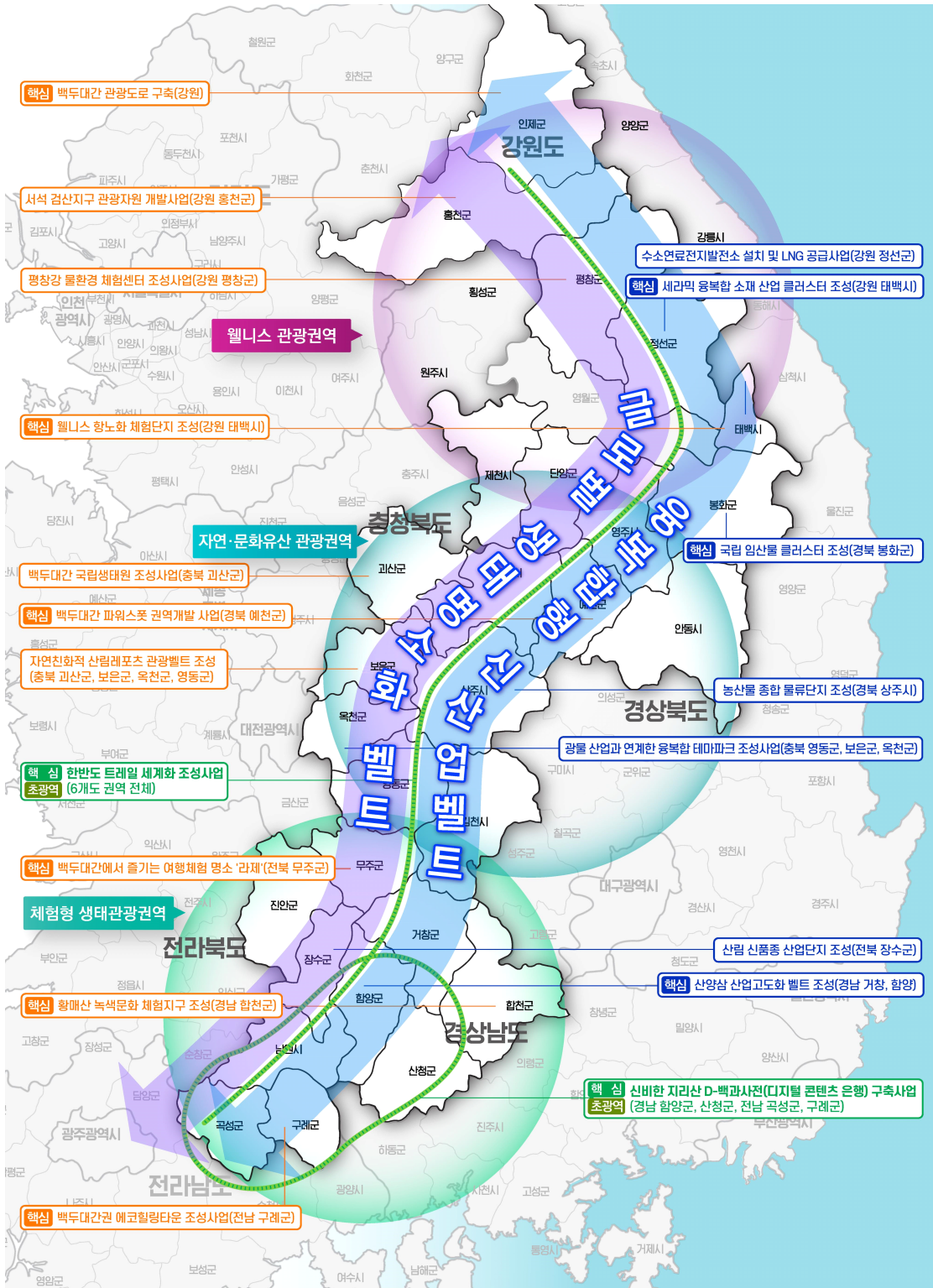
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하 ‘해안내륙 발전법’)에 따라 국토부와 권역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3개 권역(백두대간권, 내륙침단산업권, 동해안권)에 2030년 까지 총 71개 사업, 9조 1,5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0→’30년)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초광역협력사업을 기획하였다.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의 강원도 권역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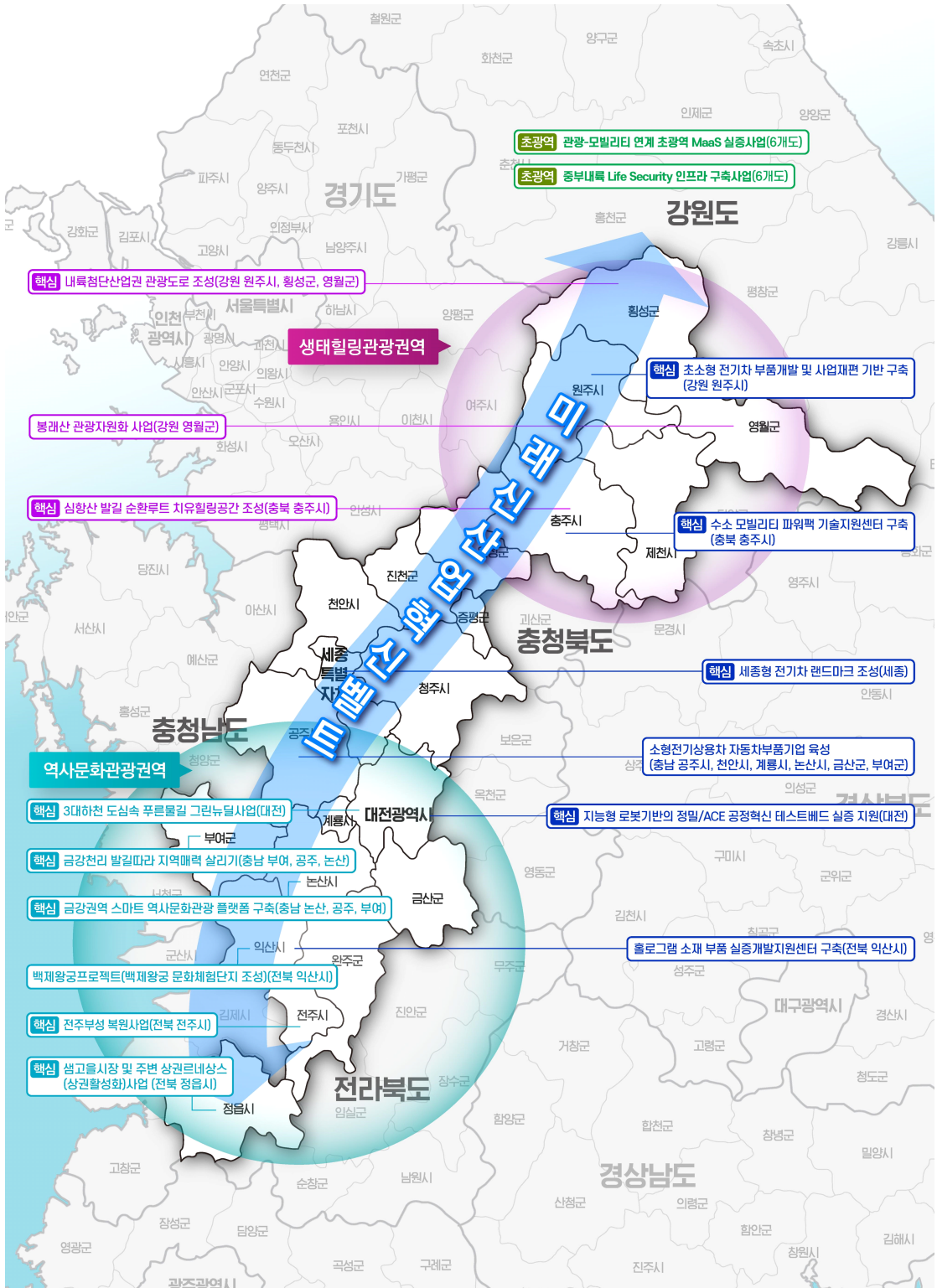
강원도가 주관하여 수립한백두대간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비전으로 국토의 중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경쟁력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권역 5개 시군(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에 23개 사업 7,933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미래 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한 내륙침단산업권(충북 주관)은 침단산업의 중심이자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3개 시군(원주, 횡성, 영월)에 21개 사업 1조 5,952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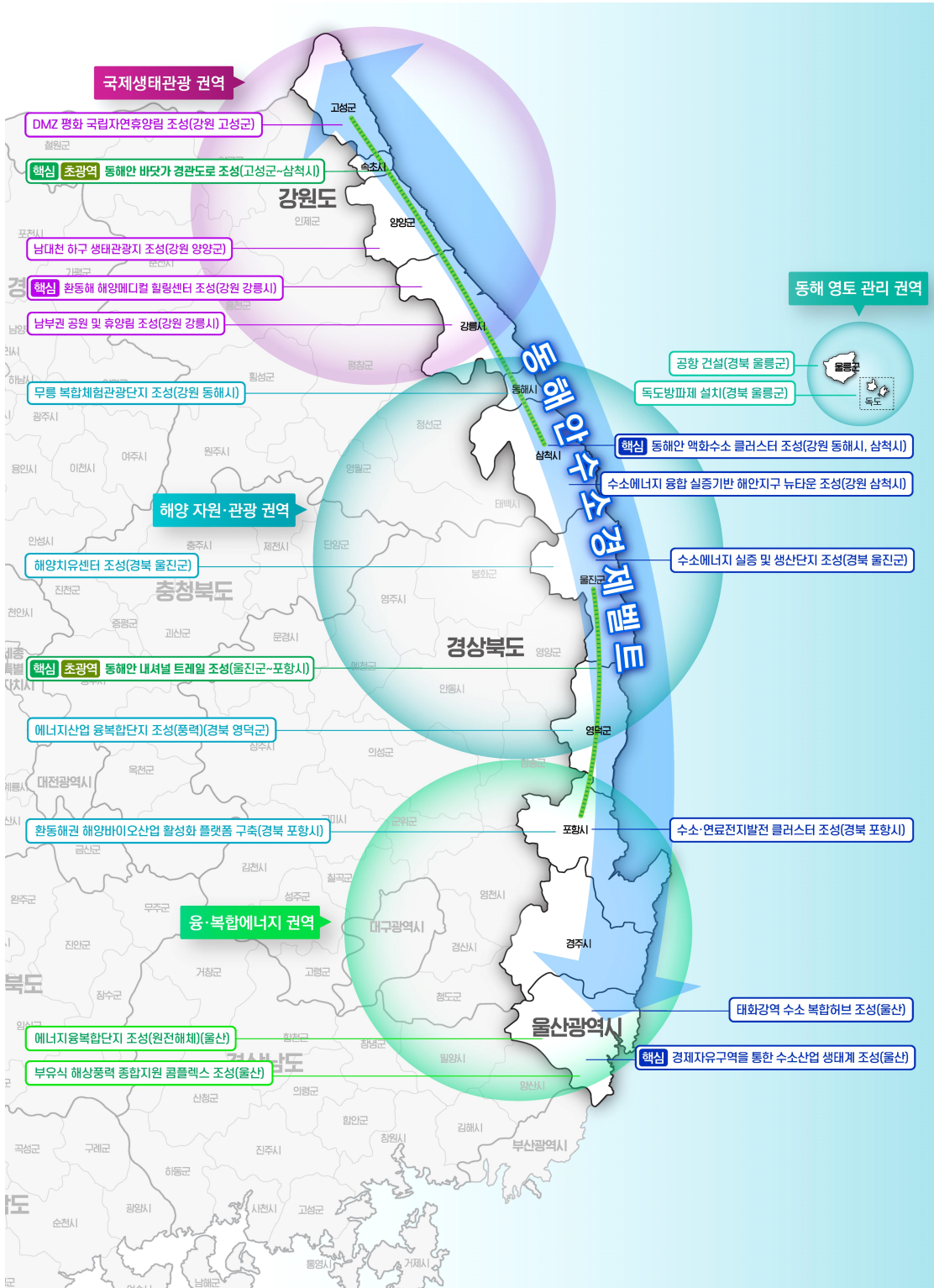
동해안권(경북 주관)은 6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에 총 사업비 6조 7,636억 원, 27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 조성’을 제시한다.



[백두대간권 주요 구상도]



[내륙첨단산업권 주요 구상도]



[동해안권 주요 구상도]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해수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해양정책과. 2021.11.09.



건축
정책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인천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번에 착공하게 된 것이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1,067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광역시가 협약을 통해 제공한 사업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박물관 외관은 인근 월미산의 능선과 바다의 물결을 이어주는 곡선 디자인을 적용하여 활력 넘치는 바다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친환경 건축기법을 활용하여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건축물로도 손색이 없도록 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 내부는 대강당, 상설 및 기획전시공간 등으로 구성하며, 휴게 공간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조감도]

국토부, 서울시 내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시행

도시주택공급협력과. 2021.11.10.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천㎡ 미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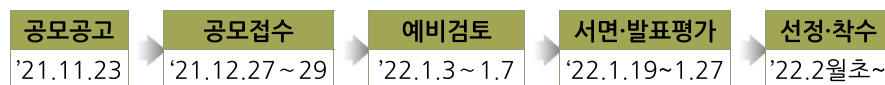
도시경제과. 2021.11.23.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

이번 사업부터는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주요 일정]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국비 97억 원 확보

도시계획과. 2021.11.11.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역대 최대인 국비 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복지증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에 따라 추진될 2022년도 주요사업은 임석천 누리길 조성사업(12억 원), 금정산 누리길 조성사업(2차)(9억 원), 석대 쓰레기매립장 제방 여가녹지 조성사업(6억 원), 반송 누리길 조성사업(5억 원,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2차)(12억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는 주민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부산시, 유엔 해비타트·오셔닉스와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 체결

주택정책과. 2021.11.18.



부산시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오셔닉스(미국 뉴욕 소재 해상도시 개발기업)는 세계 최초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세계 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개발기업 ‘오셔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바이오락(biorock) 활용을 통한 해안생태계도 재생시키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양해각서에는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 건설에 상호 간의 역할 등이 담겼다. 부산시와 유엔 해비타트, 오셔닉스는 각각 사업추진의 행정 지원자,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용한 시범모델사업 지원, 타당성 조사, 입지분석, 사업홍보 등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인천시, 22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8건에 대한 국비 확보

도로과. 2021.11.02.



인천광역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그린뉴딜)’에 중구 인성 초·중·고 일원 지중화 등 6개 군·구 8구간, 총 6.1km가 선정되어 국비 59억 원과 한전·통신사 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통학로, 전통시장 부근 도로 및 도시재생사업구간을 대상으로 국가가 20%, 한전과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시와 군·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원도심의 보행 안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 시민들이 가장크게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인도를 차지하는 전주와 골목을 어지럽게 하는 배전선로와 통신선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25년까지 48.3km를 지중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송도5공구 지식산업제조업용지 매매계약 체결

신성장산업유치과. 2021.11.04.

진행

도시
정책

건축
정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식산업제조업용지 1필지(10,279㎡)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바이오의약품약기업을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에 따른 토지공급 계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등 유전자 기술 기반 의약품과 유전자 의약품 원재료에 대한 복합생산, 유전자 전달 플랫폼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주요 입주기업들이 항체의약품 역량에 더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엘포젠, 싸토리우스 등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대형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문화유산과. 2021.11.10.

진행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인천광역시시는 9일 검단신도시 내에 건립될 예정인 (가칭)검단신도시 박물관이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박물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검단신도시 내 근린14호 공원 부지에 건축연면적 10,363㎡(지하 1층, 지상 3층), 야외 전시장 약 1,500㎡로 현 시립박물관의 2배, 검단선사박물관의 5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건립하고 건립 후에는 인천시가 무상으로 넘겨받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검단지역에는 기존 검단선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박물관 기능 및 전시 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검단신도시박물관이 건립되면 검단선사박물관은 검단신도시박물관으로 통합·이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도시개발과. 2021.11.16.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 설치 3개 부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 12일 준공

생명농업과. 2021.11.10.



광주광역시는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이 남구 대촌동에서 광산구 본량동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돼 12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역 14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해 운영하는 광주시 농협쌀조합의 광주통합RPC는 지난 2008년 1월1일 개소해 지역 쌀을 가공·저장 유통하는 시설로, 기존 위치하던 남구 대촌동 지역이 에너지밸리 산단으로 편입 조성되면서 광산구 본량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통합RPC의 시설 이전에 맞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2년간 33억원(국비 12.5 시비 6.2 자부담 14.3)을 투입, 4000t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광주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시범사업 2곳 선정

에너지산업과. 2021.11.11.



광주광역시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시범사업에 광산구 평동 산단 선광기업 건물과 동구 대인동 연수목욕탕 건물 등 민간건물 2곳을 최종 선정하고 건물당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시범사업은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건물 디자인을 고려하고 건축물과 융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건물 외장재로 사용해 건축비 절감은 물론 전력생산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과거 태양광설비는 불투명성과 재료특유의 색상, 낮은 심미성 때문에 외관에 활용되기가 어려워 주로 옥상에 설치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지붕형, 벽체형, 창호형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사용하고 있다.

내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시작

공원녹지과. 2021.11.18.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1지구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인 5,606억원을 보상액으로 확정해, 10월18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마북, 봉산, 신용, 운암산 4개 공원은 사유지 72만8,000㎡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부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완료했으며, 수용재결을 신청한 일곡, 수량, 중앙2, 송암 4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주택개조사업 665호 준공 및 집수리 등 지원

주택정책과, 2021.11.07.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내년도 사업 규모를 각각 500호, 180호로 정했다. 특히 햇살하우징은 지구온난화로 매년 연평균 기온이 올라간 점을 고려해 내년 부터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항목을 추가한다.

전남도, 전남도·신안군 등 자은도에 인피니또뮤지엄 건립 업무협약

문화예술과, 2021.11.02.



전라남도는 2일 도청에서 신안 인피니또 뮤지엄(Infinito museum) 건립 업무협약을 했다. 인피니또뮤지엄은 150억 원을 들여 신안 자은도 둔장해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한의 다리 등 자은도 일원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명소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역점 추진하는 신안 ‘1도(島)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완료

진행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한 설치 위해 설계 지침 최초로 마련

재난경감과. 2021.11.14.

완료

도시
정책

안전

행정안전부는 마을의 소교량이나 세천 같은 생활 속 소규모 공공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공공시설: 자치단체 시설로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지칭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은 설계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조차 없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지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세천	- 지역 환경에 따라 강우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계 빈도는 10년에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채택
취입보	-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
소교량	-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높이 세굴보호 등의 기준
농로	-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

조달청,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비용 및 심사과정 간소화

시설총괄과. 2021.11.22.

완료

건축
정책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건설폐기물 99% 재활용위해 업무협약 체결

자원순환정책과. 2021.11.25.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11월 26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주요 내용]

구분	내용
99% 재활용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
선별기준 강화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
처리비용 표준화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 -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
외부보관시설 설치	- 순환골재는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
지붕설치	-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

국토부,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마련

토지정책과. 2021.11.30.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

추진방안	세부과제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부동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부동산전자계약 정착
산업발전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 기반 구축 - 산업 활성화 지원 -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상생
소비자 보호 및 신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 - 신규서비스 제도화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용역 완료

건축지적과. 2021.11.30.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용역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과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을 통해 구축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데이터베이스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및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시스템에 적용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